

## Government Trust and Policy Response

- Application of Hirschman's Exit-Voice-Loyalty (EVL) Concept -

Chong Ho Kim<sup>1#</sup>, Jae Sun Wang<sup>2+</sup>

<sup>1</sup>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gu, Seoul, Korea

<sup>2</sup>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Honam University, 417 Eodeung-daero, Gwangsan-gu, Gwangju, Korea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public trust in government and public response to nuclear energy policy in Korea, applying Hirschman's exit-voice-loyalty (EVL) model. Especially, in order to complement the limitation of the existing studies, we considered trust i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separatel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various demographic variables affect positive perception on the degree of 'Voice', while the degrees of 'Exit' and 'Loyalty' are influenced by simple factors. Second, the possibility of 'Exit' was highest in the group of high-risk perception, while the highest possibility of 'Voice' was found in the group of low-risk perception. Lastly, the higher level of public trust in government, the lower possibility of 'Exit' and the higher possibility of 'Loyalty'. In particular, we found that trust in local government is the core determinant of both 'Exit' and 'Loyalty' behaviors.

**Key words:** policy response behavior, EVL(Exit, Voice, Loyalty), trust, risk perception of nuclear power

### 1. 서론

한국사회에서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2011년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던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발생으로 기존의 주요 에너지원이었던 원자력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대두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었다. 특히, 2013년 국내에서 발생한 원전 비리 사건과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원자력발전소의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하여 국내에서 원자력에 대한 회의

와 불신이 증폭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특히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주민들은 원자력은 위험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이를 규제·감독하는 정부기관들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재생산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요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 또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논란은 국내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기존부터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과 수용

# The 1st author: Chong Ho Kim, Tel. +82-62-940-5244, e-mail. 05chkim@g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Jae Sun Wang, Tel. +82-62-940-5244, e-mail. ajwjs@honam.ac.kr

성을 분석하거나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Kim, *et. al.*, 2006; Kim & Kim, 2007; Slovic, 1987; Sjöberg, 2009; Poortinga, *et. al.*, 2006). 이는 곧 국내외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관심과 논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 연구 중에서 많은 연구들이 원자력에 대한 일반인들의 수용성 혹은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신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Wang, 2013; Jeong & Kim, 2014; Siegrist, 1999; Flynn, *et. al.*, 1992; Chung & Kim, 2009). 즉 원자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원자력의 위험성이나 수용 혹은 거부의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원자력 관련 기관, 정부 혹은 사회적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원자력정책을 형성하는 중앙정부와는 구별하여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발전소 소재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발전 관련한 정책의 큰 틀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집행은 1989년 제정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전력산업기반금을 활용하여 집행되는 기금지원사업<sup>1)</sup>의 시행자는 지방정부의 수장으로 되어 있기에 발전소가 소재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니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 혹은 위험인식에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신뢰의 문제가 원자력의 수용성 및 위험인식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에는 거의 이견이 없는 듯하다. 그만큼 신뢰의 문제는 국가 발전(發電)에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합의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원자력 문제에 있어서 신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신뢰와 원자력 위험인식 및 수용성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신뢰의 정도에 따라 정부의 원자력 정책 혹은 원자력 발전정책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정부의 정책은 최종적으로 그 대상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반응을 탐색하는 것은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중요한 사전적 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국민들의 정책반응에 대한 이론적 개념으로서 Hirschman의 이탈(exit), 항의(voice), 충성(loyalty)의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Hirschman은 그의 저서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and States」(1970)에서 수요자의 서비스에 대한 반응행태를 정교하게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그의 개념들을 적용하여 국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응행태를 세 가지의 개념으로 구분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어떤 반응행태를 유발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의 원자력 관련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은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이탈, 항의, 충성 등의 반응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과 비교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국민들의 반응행태에 상대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대한 인식과 비교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주민들의 반응행태에 상대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질문을 기초로 하여 정부신뢰수준과 정부의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반응행태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4개 원전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1) 기금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 5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기본지원사업과, 발전소 소재 지자체에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Hirschman의 이탈, 항의, 충성에 대한 개념을 소개한다. 또한 정부신뢰와 위협인식, 그리고 보상인식에 대한 논의도 함께 포함한다. 3장에서는 연구설계를 통해 자료소개와 변수설명이 이루어진다. 4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 결론에서 연구내용의 요약과 함의를 제시한다.

## II. 이론적 논의

### 1. 정책반응으로서의 이탈(exit), 항의(voice), 충성(loyalty)

Hirschman(1970)의 모델은 현재의 상태에 대한 불만족(dissatisfaction)으로 인해 야기되는 행위자의 반응행태에 관한 것이다<sup>2)</sup>(Sharp, 1984; Dowding, *et. al.*, 2000; Dowding & John, 2008). Hirschman은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영역에서 불만을 가진 소비자(citizen-customer)가 나타낼 수 있는 선택적 반응행태를 이탈(exit), 항의(voice), 충성(loyalty)의 세 개념을 적용하여 경제학적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Tiebout(1956)의 가설<sup>3)4)</sup>을 확장한 것으로, Tiebout 가설이 소비자의 반응행태로 이동성(mobility)인 이탈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를 가장 정교하게 교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Kim, 2009).

Hirschman은 특정 상품,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나 정부 등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의 반응행태

로써 단순히 이탈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항의와 충성이라는 반응행태에도 주목하였다. 이탈은 현재의 불만족 상태를 벗어나 대안으로 이동하는 것을, 항의는 불만족이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참여를, 충성은 불만이나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며 현재의 불만족 상황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한다(Hirschman, 1970: 78). 세 반응행태 중, 특히 이탈과 항의는 교환관계(trade-off)에 있다<sup>5)</sup>. 이탈의 가능성이 높으면 항의의 가능성은 줄어들게 되는 반면, 충성의 가능성이 높으면 항의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sup>6)</sup>

Hirschman은 이러한 이탈과 항의의 행태를 경제영역과 정치영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즉 이탈은 경제영역에, 항의는 정치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경쟁 시장에서 A기업의 제품에 불만을 가진 소비자는 이를 배제하고 다른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반면, 지방정부는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이탈하기 위해서는 비용<sup>7)</sup>(cost)이 발생하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다. 이로 인하여 소비자는 이탈하지 않는 비용보다 이탈의 비용이 더 크거나, 이탈하지 않음으로 인한 이익이 크다면 자신의 불만을 개선하기 위하여 항의 행태를 취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소극적으로 다른 누군가가 불만사항을 개선하거나 상황이 변화되어 불만이 해결되길 조용히 기다리는 충성행태를 취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항의는 지방정부의 잘못 된 정책 또는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에 대해 지적함으로써 이를 보정할 수 있는 환류(corrective feedback) 작용을 할 수 있다(Sharp, 1984).

- 2) Kang(2005)는 Hirschman이 경제영역에서 정상적인 행위의 이탈로부터 정상으로 회복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며, 그의 연구를 기존 경제학자들이 간과하였던 '치유 가능하나 이탈행위'에 대한 연구로 보고 있다.
- 3) Tiebout(1956)는 지방정부들 간의 경쟁이 있으며, 시민은 소비자로서 각 지방정부에서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세금-서비스(tax-service package)에 따라 선호하는 지방정부로 이동함(vote with their feet)을 강조하고 있다.
- 4) Kim(2009)에 의하면, Tiebout에 대한 이후 연구는 공공재 소비자인 지역주민들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과 지역주민들의 선택행동에 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 5) Young(1974)은 이탈과 항의의 관계에서, 특정 서비스의 특성이 ①결과물의 질에 대한 관찰이 용이하지 않고, ②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③규모의 경제가 있고, ④대안탐색에 높은 비용이 소요되며, ⑤공급자 변경에 높은 비용이 소요되거나, ⑥일부의 소비자가 다른 소비자들에 비해 이탈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에서 이탈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 6) Sharp(1984)는 이탈의 의도를 전제로 한 항의의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지방정부의 성과에 문제가 많다고 인식하는 주민들은 두 종류의 항의행태를 보이는데, 첫째는 개인적 참여(individualistic participation)로 지방정부의 관료와 접촉하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는 공동체참여(communal participation)로 문제해결을 위해 이웃 주민들과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 7) 현재 속해있는 지방정부를 이탈하기 위해서는 경쟁지역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보탐색비용, 일자리 탐색비용, 주거지 탐색비용, 이주비용, 새로운 주거비용 등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한편, 이탈과 항의의 관계는 지방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주민들과 그렇지 않은 주민들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Peterson, 1981; Sharp, 1984에서 재인용).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자는 지역주민이 평균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세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일부 계층의 주민들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들에게 정책으로 인한 이익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다. 이들은 고소득 계층이기에 타지역으로 이탈이 용이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자는 이들의 항의행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이들을 위한 정책이 우선순위가 된다. 반면, 저소득 층이자 평균 이하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주민들은 타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자는 이들의 항의 행태에는 민감하지 않게 반응하여 결과적으로 이들에게는 정책으로 인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지방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주민들은 이탈과 항의행태 둘 모두를 나타낼 수 있으며, 동시에 이탈이 항의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게 되지만,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은 이와는 달리 충성행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지역주민이 이탈, 항의, 충성 중 어떠한 행태를 선택하더라도 이는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다(Orbell & Uno, 1972).

이상에서와 같이 Hirschman(1970)의 세 가지 개념을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가진 지역주민이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을 세 가지의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Hirschman(1970)의 개념은 기존 개인의 선택에 초점을 맞춘 경제학적 관점에 국한하여 설명하는 것을 경제적 관점으로서의 이탈과 정치적 관점으로서의 항의 그리고 이탈을 완화하기 위한 충성의 개념까지 확장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이 있다.<sup>8)</sup>

이탈, 항의, 충성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조직 내에서 직무 혹은 조직에 대한 불만족하는 구성원이 선택하는 반응의 행태를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Rusbult, *et. al.*(1988)은 직장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세 가지 개

념에 태만(neglect)의 개념까지 추가하여 반응행태를 더욱 확장하여 분석한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Kim, 2009; Kim & Park, 2005; Rusbult, *et. al.*, 1988). 본 연구에서는 Hirschman(1970)이 초기에 제시한 세 가지의 개념을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구분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의 수준에 따라서 이러한 반응행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다.

## 2. 정부신뢰

정부가 행하는 정책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는 많은 연구에서 원자력을 비롯한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수용성이나 위험인식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Kim, *et. al.*, 2010; Wang & Lee, 2011). 특히 최근 발생한 한수원 원전비리와 같은 사건을 계기로 원자력 정책의 수용이나 위험인식에 있어서 신뢰는 핵심적인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Wang, 2013; Jeong & Kim, 2014). 일반 국민들은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전문지식뿐 아니라 이의 파급효과나 위험성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말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통계자료와 과학적 전문지식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면 그 정보 또한 신뢰하게 되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면 그 정보 또한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와 연결된다. 정부가 원자력과 관련되어 이의 긍정적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원자력에 대해 신뢰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 또한 신뢰하지 못하여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연구로서 Slovic(1993)은 많은 연구에서 신뢰의 부족은 위험관리의 성공과 실패를 기능하는 중요한 요

8) Barry(1974)는 Hirschman이 비경제적인 항의까지 경제학적 설명인 비용과 편익의 함수로 설명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소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Bella, *et al.*(1988)은 핵폐기물 저장소 건립과정에서 사람들의 국가제도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정부에 대한 신뢰의 결여는 정책집행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순응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Park, 2008).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서비스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 또한 높아 이에 대해 만족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만족할 것이다. 정책 대상자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반응행태를 보일 수 있다. 정부의 정책에 만족하지 못하는 정책대상자들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 현재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Tiebout, 1956), 자신들의 불만족에 대해 시위 등의 행태를 통해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침묵하며 불만족 사항이 개선되기를 기다릴 수도 있다(Hirschman, 1970). 원자력발전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은 국민들은 원자력발전소의 연장 또는 추가 건설에 충성의 반응행태를 보여 이를 지지하고, 신뢰수준이 낮은 국민들은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자 시위 등의 항의의 행태를 보이거나 원자력발전소의 폐쇄까지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경우,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현재의 거주지역을 이탈할 수도 있다.

한편, 신뢰는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이 신뢰의 대상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다. Luhmann(1980)은 신뢰를 개인 간의 신뢰(interpersonal trust)와 제체에 대한 신뢰(system trust)를 구분하였다. 개인 간의 신뢰는 상대적으로 차별화되지 않은 사회 내에서의 미시적 신뢰인 반면, 후자는 현대의 복잡화된 사회에서 제도와 같은 거시적인 신뢰를 의미한다. Rousseau, *et al.*(1998)은 신뢰의 유형을 ‘역제에 기초한 신뢰’, ‘계산에 기초한 신뢰’, ‘관계적 신뢰’, ‘제도에 기초한 신뢰’ 등으로 구분하였다. Luhmann(1980)과 Rousseau, *et al.*(1998)의 신뢰구

분에서 공통적인 것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는 점이다. 신뢰의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신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결국 제도에 대한 신뢰는 정책을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주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라고 할 수 있다. 제도에 대한 신뢰는 곧 국가제도에 대한 신뢰로 연결될 수 있으며 정부신뢰의 중요한 기초라고 할 수 있다. 결국 Luhmann(1980)과 Rousseau, *et al.*(1998)은 공통적으로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를 신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Lee & Kim(2014)는 정부신뢰의 종류로서 대상을 중심으로 거시적, 중범위적, 미시적으로 구분하였으며 거시적 수준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정부신뢰(일반적), 관료(일반)에 대한 신뢰를 포함시키고 있다. 중범위적 수준에서는 정치적 기관(의회 등)에 대한 신뢰, 정부조직(행정부)에 대한 신뢰,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경찰, 소방 등)를 포함하는 것으로, 미시적 수준에서는 특정 정치인,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정부신뢰를 정교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중범위적·미시적 수준을 함께 고려한다.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는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Rahn & Rudolph, 2006).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또한 높을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 함께 감소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중앙정부 불신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방정부 신뢰가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은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지만, 이의 집행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지방정부와 밀접하게 접촉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구분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정부신뢰에 대한 많은 연구 중에서 정부신뢰의 효과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정부신뢰의 효과를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관계에 있어서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정책 수용성을 증진하는 것으로 제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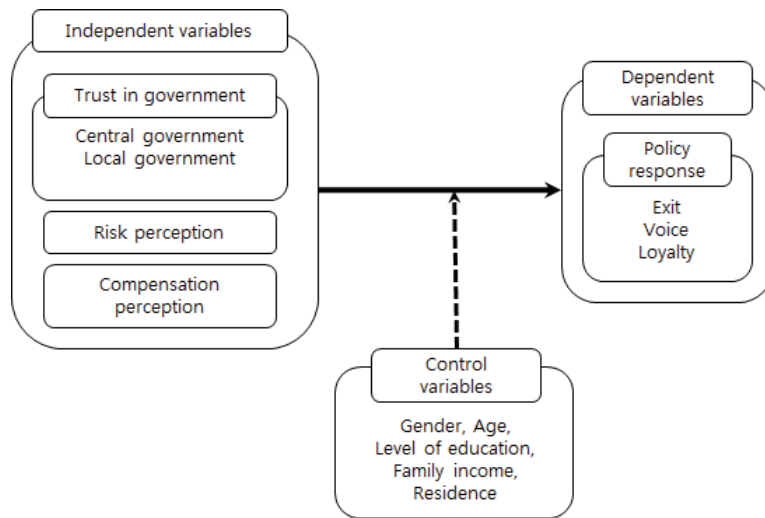


Figure 1. Framework

고 있다(Cummings & Bromiley, 1995). 또한 정부기관과 시민을 연결함으로써 양자 간의 협력증진과 이로 인한 정책의 효율성 증진을 효과로 제시하고 있다(Evans, 1996).

이상에서와 같이 정부에 대한 신뢰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정책수용과 효과성의 핵심변수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신뢰의 수준이 높으면 정책의 수용성과 집행의 효과성이 높아진다는 단편적인 연구결과에 머무르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는 곧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정부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것이며, 그에 따라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논리일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신뢰 수준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다양한 정책에 대한 반응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함과 동시에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를 구분하여 함께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분석들이 가지는 단편성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분석틀을 제시하면 <Figure 1>과 같다.

### III. 연구설계

#### 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서 4개 원전 지역(영광군, 울진군, 경주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여를 대상으로 조사(조사기간: 2015.3.17.~4.8.)한 설문조사를 자료이다. 표집방법은 4개 원전지역별로 보상지역 200명, 비보상

Table 1. Demographic analysis

<b>Total</b>		100,0(1,014)	
<b>Gender</b>	<b>Male</b>	50,2(509)	<b>Compensation area/Non compensation area</b>
	<b>Female</b>	49,8(505)	
<b>Age</b>	<b>19-29</b>	13,1(133)	<b>Level of education</b>
	<b>30-39</b>	14,3(145)	
	<b>40-49</b>	17,6(178)	
	<b>50-59</b>	20,4(207)	<b>Family income</b>
	<b>Over 60</b>	34,6(351)	
	<b>Residence</b>		
<b>Yeonggwang</b>	25,1(255)	-1,990,000	30,5(309)
<b>Uljin</b>	24,8(251)	2,000,000-2,990,000	15,8(160)
<b>Wolseong</b>	24,7(250)	3,000,000-3,990,000	19,3(196)
<b>Gori</b>	25,4(258)	4,000,000-4,990,000	12,7(129)
		5,000,000-	21,7(220)

지역 50명씩 임의할당 후, 할당 내에서는 읍/면/동별, 성별, 연령대별 기준으로 비례할당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표본크기는 총 1,014명으로 영광군 255명, 울진군 251명, 경주시 250명, 기장군 258명이다. 조사방법은 면접원에 의한 1:1 대면면접조사 방식을 사용하였다.

2. 변수측정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하는 변수로는 이탈, 항의, 충성의 수준과 정부신뢰의 수준, 원자력발전에 대한 위협인식 수준, 그리고 보상에 대한 인식 수준이다. 이탈, 항의, 충성에 대한 측정은 기존 세 가지 개념을 측정했던 연구 Lyons & Lowery(1989), Kim & Park(2005) 등이 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게 재진술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정부신뢰에 대한 문항은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을 묻는 문항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원자력발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중앙정부와 실제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해 현장에서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두 차원을 구분하여 측정함으로써 기존의 연

구들의 기관에 대한 신뢰측정의 단편성을 보완하고자 함이다.

이와 함께 원자력에 대한 반응행태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원자력에 대한 위협인식 수준과 원자력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대한 인식 수준에 대해 측정하였다. 다양한 연구에서 지각된 위협인식은 원자력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위협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변수임을 강조하고 있다(Fischhoff, *et. al.*, 1978; Frewer, *et. al.*, 1998; Kim, *et. al.*, 2014). 이는 지각된 위협인식에 따라 원자력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응행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 서비스와 관련 정책 대상자들의 순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으로 제공하는 보상에 대한 인식에 따라 정책 대상자들의 반응행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Tiebout, 1950; Hirschman, 1970; Park, 2008). 이는 보상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응행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

Table 2. Measuring variables and reliability of measurement

Variables	Conceptions		Questions	Score	Cronbach's α
Dependent variables	Exit		- In the long term, I am considering moving to another location due to the nuclear power plant. - I'm thinking of moving to safer areas	0~8	.909
	Voice		- I have the experience that participated in anti-nuclear group activities - I tend to strongly criticize the government's nuclear power policy		.413
	Loyalty		- I tried to actively cooperate with the nuclear policy of the government - I support the nuclear policy of the government is in progress		.815
Independent variables	Government trust 9)	Central	- Government - President - Minister of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Minister of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0~16	.781
		Local	- Local government head in region of nuclear power plant - Local assembly(Local assembly man)	0~8	.538
	Risk perception		- Nuclear power produces hazardous waste - Nuclear power is harmful to people's health - Nuclear power plants are dangerous	0~12	.820
	Compensation perception		- Compensation benefits due to the nuclear facility location is satisfactory - I am satisfied with the current level of compensation related to the nuclear power plant	0~8	.867

9) 정부에 대한 신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원자력발전 관련 정책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행정부와 대통령, 그리고 원자력발전 관련 기관 등에 의해 결정되지만,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주체는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방정부의 행정부와 의회이기 때문이다.

라서 본 연구에서도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 수준과 보상에 대한 인식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원자력 위험인식 수준과 비교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은 모두 0점('매우 아니다' 혹은 '매우 불만')에서 4점('매우 그렇다' 혹은 '매우 만족')으로 재코딩하여 각 개념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합계로 종합적인 지표를 구성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기술통계 분석

(Table 3)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7.06)는 보통 수준 미만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3.62)는 더욱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네 원전지역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원자력 위험인식 수준에 대해서 네 원전지역 주민들은 강한 위험인식(8.41)을 보이고 있다.

보상에 대한 인식 수준(2.69)은 낮게 나타나 원자력 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원자력 정책에 대한 반응행태로서 이탈에 대한 찬성의 정도(2.15)는 낮은 수준이며, 항의(2.17) 역시 낮은 수준이다. 반면 충성(3.29)은 다른 반응행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 정도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탈, 항의, 충성의 가능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탈과 항의에 비해서는 충성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항의의 경우 실제 반핵단체의 활동경

험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점에서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측할 수 있다. 이탈의 수준이 낮은 것은 네 개 지역 모두 시골지역이라 오랫동안 삶의 터전을 이루어온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이탈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 2.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차이분석

(Table 4)는 중앙정부 신뢰수준에 대해서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먼저 중앙정부 신뢰수준에 대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지역, 연령, 학력, 소득수준 등이다. 성별을 제외하고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 각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지역별로는 울진(7.62), 월성(7.44), 고리(7.22) 등이 유사한 신뢰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영광(5.96)이 다른 지역에 비해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수준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70대 이상 고령 응답자들(9.00)이 가장 높은 중앙정부 신뢰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30대 이하(6.02~6.05)는 유사한 정도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에 있어서 세대별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력별로는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중졸 이하 집단(8.15)에서 가장 높은 반면, 고졸(6.73)과 대학재학 이상(6.45) 집단에서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연령대와 학력수준별 차이는 젊은 층과 고학력층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아짐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N	Minimum	Maximum	Mean	S.D.
Government Trust	Central	859	.00	16.00	7.06	3.32855
	Local	933	.00	8.00	3.62	1.38387
Risk perception		1,014	.00	12.00	8.41	2.61497
Compensation perception		1,014	.00	8.00	2.69	1.87274
Exit		1,014	.00	8.00	2.15	1.58410
Voice		1,014	.00	8.00	2.17	2.01935
Loyalty		1,014	.00	8.00	3.29	1.66907

Table 4. Trust toward central government by demographic variables

Trust in central government		N	Mean	F	Sig.
Gender	Male	451	6.91	1.881	.171
	Female	408	7.22		
Residence	<b>Yeonggwang</b>	<b>208</b>	<b>5.96</b>	10.954	.000
	Uljin	204	7.62		
	Wolseong	196	7.44		
	Gori	251	7.22		
Age	Under 20's	119	6.02	16.570	.000
	30's	129	6.05		
	40's	165	6.58		
	50's	179	7.11		
	60's	131	7.53		
	Over 70's	136	9.00		
Level of education	Under graduation of middle school	258	8.15	21.160	.000
	Graduation of high school	305	6.73		
	Over in university	296	6.45		
Family income	Under 1,000,000	97	8.34	6.926	.000
	1,000,000-1,990,000	140	7.83		
	2,000,000-2,990,000	133	7.11		
	3,000,000-3,990,000	173	6.77		
	4,000,000-4,990,000	116	6.41		
	Over 5,000,000	200	6.49		

다른 집단에 비해 이들 집단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수준별로는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 집단(8.34)이 가장 높은 중앙정부 신뢰수준을 보였으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6.41~7.83)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소득 수준 별로도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은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의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각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5〉는 지방정부의 신뢰수준에 대해서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지방정부의 신뢰수준은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등에 따라 각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신뢰수준 역시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의해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 단,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수준과 비교하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은 지역 변수가 아닌 연령 변수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은

지역별로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별로 여성(3.73)이 남성(3.50)에 비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근소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고령자일수록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70대 이상(4.14)의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가장 높은 반면, 20~50대까지(3.37~3.49)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에서 연령대별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던 결과와 대조된다. 이를 통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은 공통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은 세대별 차이가 뚜렷한 반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은 세대별 차이가 뚜렷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경우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응답자의 주관적 기준에 의한 판단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반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접근 또한 용이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와의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별로 유사한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력별로는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지방정부에 대한

Table 5. Trust toward local government by demographic variables

Trust in local government		N	Mean	F	Sig.
Gender	Male	480	3.50	6.403	.012
	Female	453	3.73		
Residence	Yeonggwang	224	3.59	1.717	.162
	Uljin	224	3.75		
	Wolseong	232	3.66		
	Gori	253	3.47		
Age	Under 20's	118	3.42	8.331	.000
	30's	134	3.38		
	40's	166	3.37		
	50's	188	3.49		
	60's	159	3.80		
	Over 70's	168	4.14		
Level of education	Under graduation of middle school	315	3.92	13.204	.000
	Graduation of high school	317	3.54		
	Over in university	301	3.38		
Family income	Under 1,000,000	126	3.94	4.328	.001
	1,000,000-1,990,000	157	3.90		
	2,000,000-2,990,000	147	3.42		
	3,000,000-3,990,000	184	3.46		
	4,000,000-4,990,000	114	3.63		
	Over 5,000,000	205	3.46		

신뢰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중졸 이하(3.92) 집단이 가장 높은 신뢰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대학재학 이상(3.38)은 가장 낮은 신뢰수준을 보이고 있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정부의 신뢰수준과 동일한 결과이나 집단 간 차이의 폭이

중앙정부의 신뢰수준보다 작다.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인구통계학적 변수에서 각 집단별로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은 원자력 위험인식수준에 대해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는 지역별 차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 및

Table 6. Risk perception by demographic variables

Risk perception		N	Mean	F	Sig.
Gender	Male	509	8.26	3.236	.072
	Female	505	8.56		
Residence	Yeonggwang	255	8.13	7.224	.000
	Uljin	251	8.07		
	Wolseong	250	9.03		
	Gori	258	8.41		
Age	Under 20's	133	8.19	1.638	.147
	30's	145	8.01		
	40's	178	8.35		
	50's	207	8.73		
	60's	166	8.54		
	Over 70's	185	8.45		
Level of education	Under graduation of middle school	343	8.48	.304	.738
	Graduation of high school	346	8.41		
	Over in university	325	8.33		
Family income	Under 1,000,000	137	8.28	.638	.670
	1,000,000-1,990,000	172	8.57		
	2,000,000-2,990,000	160	8.14		
	3,000,000-3,990,000	196	8.55		
	4,000,000-4,990,000	129	8.41		
	Over 5,000,000	220	8.43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수준과 상반되는 결과로 중앙 및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는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의해 차이가 발생하는 반면, 원자력에 대한 위협인식은 지역에 의해서만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 지역별로 월성(9.03)에서 위협인식이 가장 높으며, 고리(8.41), 영광(8.13), 울진(8.0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별 차이는 지역의 맥락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지역의 상황에 근거하여 더욱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반면 성별, 연령별, 학력별 소득수준별 집단 간 차이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포함된 복합적인 처방이 요구되는 반면, 원자력 위협인식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하지만 네 지역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처방을 내릴 필요성이 제기된다.

〈Table 7〉은 보상인식 수준에 대해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sup>10)</sup> 보상인식 수준은 지역,

연령, 학력수준 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지역은 고리(2.94)가 보상에 대해 가장 높은 긍정적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울진(2.87), 월성(2.44), 영광(2.37)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20대 이하(3.17)와 30대(3.29)인 청년층에서 보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적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40대 이상 중장년과 고령층(2.23~2.83)에서는 청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상에 대해 낮은 긍정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 청년층에서 낮은 수준의 중앙 정부 신뢰수준을 보여준 것과 달리, 보상에 대한 인식은 청년층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학재학 이상(3.16)의 학력수준에서 보상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는 비슷하게 낮은 수준에서 보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대와 학력수준별 차이는 청년층과 고학력층에서 보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이들 집단에서 경제적 보상이 정책 반응에 대해 강한 유인체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7. Compensation perception by demographics

Compensation perception		N	Mean	F	Sig.
Gender	Male	410	2.86	3.464	.063
	Female	398	2.60		
Residence	<b>Yeonggwang</b>	<b>201</b>	<b>2.37</b>	2.762	.041
	<b>Uljin</b>	<b>201</b>	<b>2.87</b>		
	<b>Wolseong</b>	<b>200</b>	<b>2.44</b>		
	<b>Gori</b>	<b>206</b>	<b>2.94</b>		
Age	<b>Under 20's</b>	<b>109</b>	<b>3.17</b>	5.849	.000
	<b>30's</b>	<b>115</b>	<b>3.29</b>		
	<b>40's</b>	<b>143</b>	<b>2.65</b>		
	<b>50's</b>	<b>166</b>	<b>2.23</b>		
	<b>60's</b>	<b>132</b>	<b>2.83</b>		
	<b>Over 70's</b>	<b>143</b>	<b>2.52</b>		
Level of education	<b>Under graduation of middle school</b>	<b>268</b>	<b>2.56</b>	9.026	.000
	<b>Graduation of high school</b>	<b>292</b>	<b>2.52</b>		
	<b>Over in university</b>	<b>248</b>	<b>3.16</b>		
Family income	Under 1,000,000	103	2.55	1.748	.121
	1,000,000-1,990,000	136	2.57		
	2,000,000-2,990,000	125	2.77		
	3,000,000-3,990,000	158	3.04		
	4,000,000-4,990,000	105	2.45		
Over 5,000,000	181	2.82			

10) 보상인식에 대한 자료는 보상지역에 해당하는 주민들에 대한 설문만을 활용하였다.

Table 8. Policy responses by demographic variables : Exit

Exit		N	Mean	F	Sig.
Gender	Male	509	2.23	6.403	.107
	Female	505	2.07		
Residence	<b>Yeonggwang</b>	<b>255</b>	<b>1.81</b>	24.800	.000
	Uljin	251	1.68		
	Wolseong	250	2.62		
	Gori	258	2.50		
Age	Under 20's	133	1.90	4.566	.000
	30's	145	1.81		
	40's	178	2.26		
	50's	207	2.43		
	60's	166	2.39		
	Over 70's	185	1.99		
Level of education	Under graduation of middle school	343	2.24	.795	.452
	Graduation of high school	346	2.09		
	Over in university	325	2.13		
Family income	Under 1,000,000	137	2.10	.492	.783
	1,000,000-1,990,000	172	2.25		
	2,000,000-2,990,000	160	2.23		
	3,000,000-3,990,000	196	2.03		
	4,000,000-4,990,000	129	2.17		
	Over 5,000,000	220	2.16		

〈Table 8〉은 인구통계학 변수별 정책반응행태 중 이탈에 대한 가능성을 분석한 것이다. 정책에 대한 반응행태로서 이탈에 대한 가능성은 지역별, 연령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월성(2.62)에서 이탈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리(2.50), 영광(1.81), 울진(1.6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1.90)와 30대(1.81)에 비해 40대에서 60대(2.26~2.43)가 상대적으로 이탈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고연령층 일수록 이탈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고연령층 일수록 정책의 불만이 있으면 포기하고 떠나는 방식을 취하는 반면 젊을수록 이탈 대신 다른 방식, 예를 들면 항의와 같은 방식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젊은 세대의 경우 이탈 대신 그것을 대체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령층이 낮은 집단은 항의의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항의의 경우 지역, 연령, 학력, 소득수준 등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의해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 이는

이탈보다 항의에 대한 태도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는 고리(2.41), 월성(2.32), 영광(2.11), 울진(1.84)의 순으로 항의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광과 울진은 이탈에 대한 반응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낸 반면, 월성의 경우 이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리는 항의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가장 높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별로 이탈과 항의의 반응행태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2.44)와 30대(2.61)에서 항의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난 반면, 60대(1.73)와 70대 이상(1.41)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연령대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항의에 대한 반응이 상대적으로 더욱 긍정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예측한 것과 일치한다. 젊은 층의 경우 정책에 대한 불만을 떠나는 것으로 표현하는 대신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표현하고 있고, 고연령층에 비해 이탈의 방식을 항의의 방식으로 대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책에 대한 반응의 선택지가 더욱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9. Policy response by demographic variables : Voice

Voice		N	Mean	F	Sig.
Gender	Male	509	2.29	3.627	.057
	Female	505	2.05		
Residence	<b>Yeonggwang</b>	<b>255</b>	<b>2.11</b>	4.106	.007
	Uljin	251	1.84		
	Wolseong	250	2.32		
	Gori	258	2.41		
Age	Under 20's	133	2.44	10.958	.000
	30's	145	2.61		
	40's	178	2.39		
	50's	207	2.54		
	60's	166	1.73		
Level of education	Under graduation of middle school	343	1.61	28.570	.000
	Graduation of high school	346	2.18		
	Over in university	325	2.76		
Family income	Under 1,000,000	137	1.46	8.643	.000
	1,000,000-1,990,000	172	1.81		
	2,000,000-2,990,000	160	2.22		
	3,000,000-3,990,000	196	2.14		
	4,000,000-4,990,000	129	2.45		
	Over 5,000,000	220	2.73		

학력별로는 대학재학 이상(2.76)이 항의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중졸 이하 집단(1.61)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학력일수록 항의의 방식에 더욱 긍정적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결국 학력수준이 높다는 것은 이탈이 아닌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목소리를 내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항의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월 소득 500만 원 이상 집단(2.73)이 항의에 대해 가장 높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100만 원 미만 집단(1.46)이 가장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젊은 집

Table 10. Policy responses by demographic variables : Loyalty

Loyalty		N	Mean	F	Sig.
Gender	<b>Male</b>	<b>509</b>	<b>3.43</b>	6.567	.011
	Female	505	3.16		
Residence	<b>Yeonggwang</b>	<b>255</b>	<b>2.95</b>	8.710	.000
	Uljin	251	3.38		
	Wolseong	250	3.18		
	Gori	258	3.66		
Age	Under 20's	133	3.10	.750	.586
	30's	145	3.25		
	40's	178	3.21		
	50's	207	3.37		
	60's	166	3.37		
Level of education	Under graduation of middle school	343	3.26	.260	.771
	Graduation of high school	346	3.27		
	Over in university	325	3.35		
Family income	Under 1,000,000	137	3.14	.935	.458
	1,000,000-1,990,000	172	3.34		
	2,000,000-2,990,000	160	3.48		
	3,000,000-3,990,000	196	3.30		
	4,000,000-4,990,000	129	3.12		
	Over 5,000,000	220	3.31		

단, 고학력 집단, 고소득 집단에서 정책에 대한 반응의 양태가 이탈과 함께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항의의 방식 등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충성은 성별과 지역 간 차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3.43)이 여성(3.16)에 비해 충성에 대해서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고리(3.66)가 충성에 대해 가장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울진(3.38)이 두 번째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울진 경우 이탈과 항의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던 반면, 충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항의는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에 의해 차이가 발생되는 반면, 이탈과 충성은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항의에 비해 단순하다. 또한 지역 간의 차이가 세 가지 반응행태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지역별로 정책에 대한 다양한 반응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별 반응행태에 대한 더욱 자세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3.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 위험인식, 그리고 보상인식에 따른 정책반응행태<sup>11)</sup>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에 따라 원자력 정책에 대한 반응행태를 분석한 결과는 <Figure 2>에 제시되었다.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충성(53.9%)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항의(38.2%)와 이탈(35.1%)의 순서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 충성의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항의에 대한 긍정적 비율이 38%라는 것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충성과 함께 항의의 반응 역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이탈과 항의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동일한 수준(45.2%)에서 높게 나타났다. 충성의 반응(38.7%)은 다른 두 반응행태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결국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충성의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낮은 집단에서는 이탈과 항의의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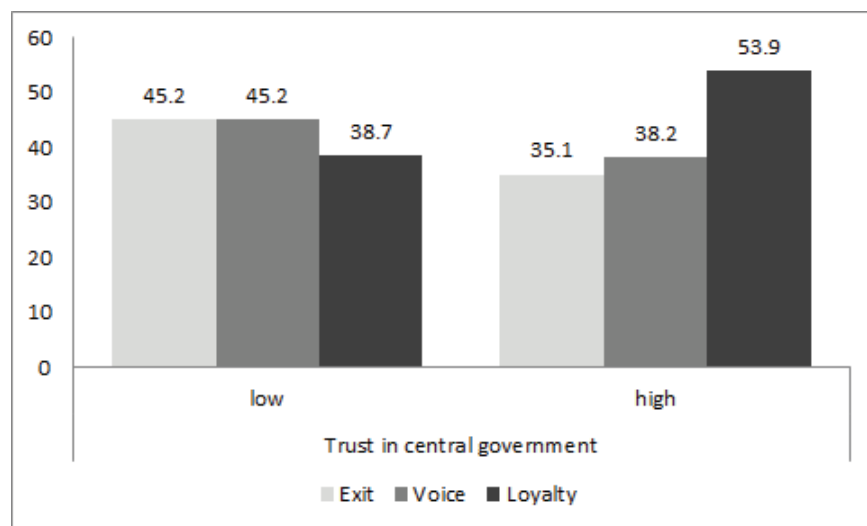


Figure 2. Policy responses by level of trust toward central government

11) 본 분석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보상에 대한 인식, 이탈, 항의 및 충성에 대한 긍정적 반응의 점수를 평균을 중심으로 평균보다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위험인식과 보상인식, 그리고 이탈, 항의, 충성에 대한 반응행태 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중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위험인식, 그리고 보상인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나타나는 이탈, 항의 및 충성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높은 비율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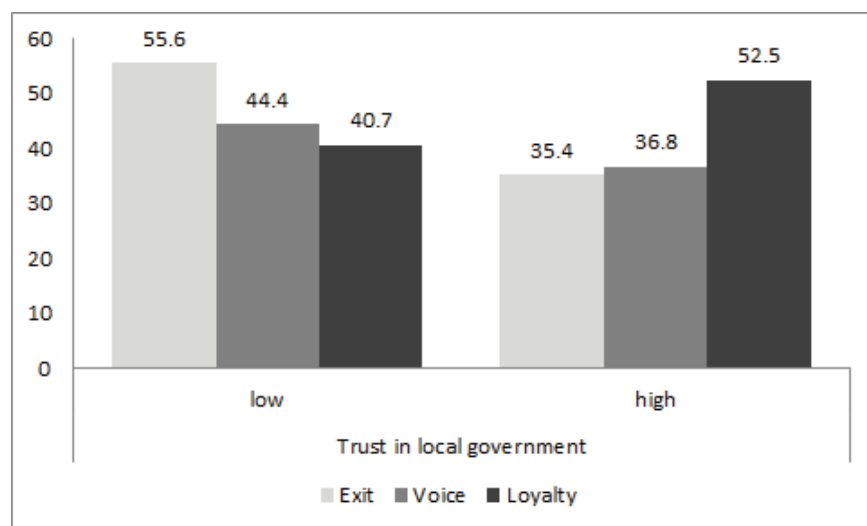


Figure 3. Policy responses by level of trust toward local government

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각각에서 충성과 이탈 및 항의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항의는 두 집단 모두에서 중요한 반응행태로 나타나고 있다.<sup>12)</sup>

〈Figure 3〉는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에 따라 원자력 정책에 대한 반응행태를 분석한 결과이다. 신뢰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충성(52.5%)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항의(36.8%), 이탈(35.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신뢰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이탈(55.6%)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가장 높으며, 항의(44.4%), 충성(4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이탈의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이탈과 항의가 동일한 수준이었으며, 이탈에 대한 긍정적 반응의 비율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집단에서 약 10%p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을 경우 이탈방식의 반응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것이다.<sup>13)</sup>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에 따른 반응행태에서 보다 지방정부에서는 세 가지 반응행태의 가능성이 신뢰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은 세 가지 반응행태를 명확하게 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멀리 느껴지며 중앙정부와 직접적인 관계의 경험이 드물지만, 지방정부의 경우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에 신뢰수준에 따라 반응행태에 있어서 더욱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특히 주민들의 이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Figure 4〉는 위험인식 수준에 따라 원자력 정책에 대한 반응행태를 분석한 결과이다.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이 높은 집단에서는 충성(48.1%)에 대한 긍정적 반응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이탈(38.8%), 항의(36.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험인식이 낮은 집단에서도 충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충성에 대한 긍정적 반응의 비율은 위험인식이 높은 집단에 비

12) 보상지역 주민의 설문 자료만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은 집단 : 이탈 37.8%, 항의 40.1%, 충성 54.3%  
 ②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은 집단 : 이탈 44.4%, 항의 44.4%, 충성 37.0%

13) 보상지역 주민의 설문 자료만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은 집단 : 이탈 37.1%, 항의 38.4%, 충성 53.0%  
 ②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은 집단 : 이탈 56.0%, 항의 44.0%, 충성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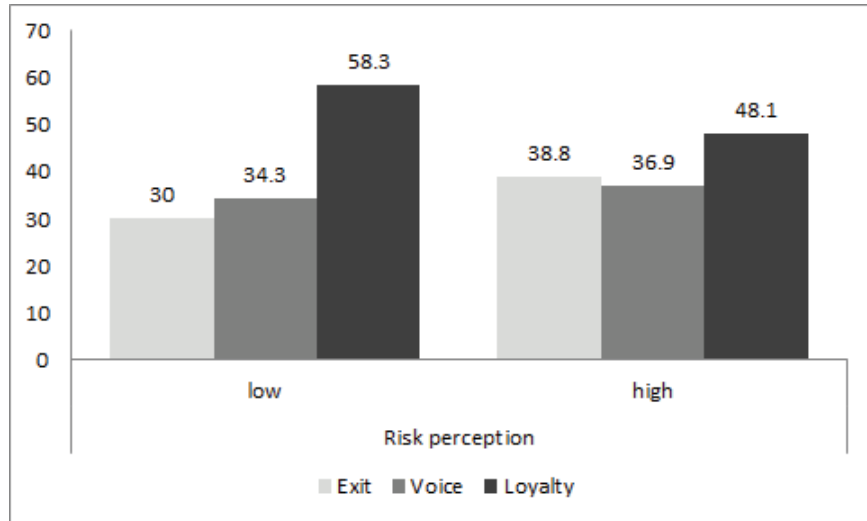


Figure 4. Policy responses by level of risk perce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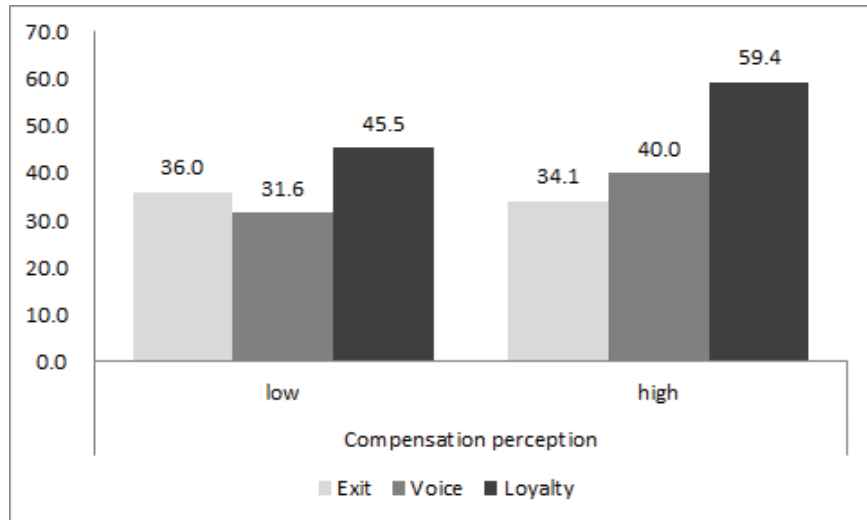


Figure 5. Policy responses by level of compensation perception

해 낮은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항의(34.3%), 이탈(3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험인식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충성에 대한 긍정적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에서와는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sup>14)</sup> 단 위험인식이 높은 집단에서는 이탈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항의보다 높은 반면, 낮은 집단에서는 항의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강할 경우 이탈의 가능성이 높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ure 5〉는 보상인식 수준에 따라 원자력 정책에 대한 반응행태를 분석한 결과이다. 보상인식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모두 충성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앙 및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에서 신뢰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충성이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신뢰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충성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던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이다. 한편, 보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수준이 낮은 집단

14) 보상지역 주민의 설문 자료만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위험인식이 높은 집단 : 이탈 42.5%, 항의 38.7%, 충성 48.1%
- ② 위험인식이 낮은 집단 : 이탈 29.1%, 항의 35.3%, 충성 59.7%

에서는 항의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보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이탈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경우 충성이 강화되고 이탈이나 항의의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sup>15)</sup>

4. 관계분석

〈Table 11〉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이탈, 항의 및 충성 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과 중앙 및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수준과는 負(-)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탈, 항의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는 正(+)<sup>15)</sup>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충성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는 負(-)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강할수록 중앙 및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은 낮아지며, 이탈과 항의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충성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상에 대한 인식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수준, 그리고 충성과는 正(+)<sup>15)</sup>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탈과는 負(-)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정책반응행태 중 항의만이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보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질수록 중앙 및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에 대한 긍정적 반응, 그리고 충성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반면, 이탈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는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중앙정부를 신뢰하면 지방정부 역시 신뢰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는 이탈과 항의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는 負(-)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충성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는 正(+)<sup>15)</sup>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이탈과 항의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반면, 충성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수준 역시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수준과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이탈과 항의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반면, 충성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정책반응행태 중, 이탈은 항의와 正(+)<sup>15)</sup>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충성과는 負(-)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정책에 대한 반응으로 이탈의 가능성이 높을수록 항의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반면, 충성의 가능성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항의와 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Table 12〉는 세 가지 정책반응행태 각각을 종속변수, 정부에 대한 신뢰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위험인식, 그리고 보상에 대한 인식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인과

Table 11.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Risk perception	Compensation perception	Government trust		Exit	Voice	Loyalty
				Central	Local			
Risk perception		1						
Compensation perception		-.237**	1					
Government trust	Central	-.173**	.143**	1				
	Local	-.104**	.137**	.546**	1			
Exit		.193**	-.071*	-.160**	-.157**	1		
Voice		.089**	.023	-.162**	-.144**	.327**	1	
Loyalty		-.173**	.260**	.277**	.224**	-.129**	-.050	1

\* p<.05, \*\* p<.01

15) 보상지역 주민의 설문 자료만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보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은 집단 : 이탈 34.4%, 항의 40.4%, 충성 58.2%
- ② 보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낮은 집단 : 이탈 39.4%, 항의 34.4%, 충성 47.6%

Table 12.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Exit		Voice		Loyalty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Constant		1.044** (.497)		.301 (.654)		1.471** (.511)	
Government trust	Central	-.071** (.020)	-.146	-.050* (.027)	-.080	.074** (.021)	.145
	Local	-.087* (.045)	-.076	-.093 (.059)	-.064	.140** (.046)	.118
Risk perception		.073** (.021)	.117	.070* (.028)	.088	-.080** (.022)	-.123
Compensation perception		-.027 (.030)	-.031	.018 (.039)	.016	.173** (.031)	.191
Control variables	Gender	-.163 (.109)	-.050	.167 (.144)	.040	-.252* (.112)	-.075
	Age	.014** (.004)	.148	.003 (.006)	.025	.011* (.004)	.113
	Level of education	.028 (.046)	.028	.226** (.061)	.176	.098* (.047)	.094
	Family income	5.109E-5 (.000)	.008	.001 (.000)	.065	.000 (.000)	.035
	Residence dummy1 (Uljin)	.089 (.155)	.023	-.280 (.204)	-.058	.215 (.159)	.054
	Residence dummy2 (Wolseong)	1.018** (.158)	.266	.420* (.208)	.086	.148 (.162)	.037
	Residence dummy1 (Gori)	.811** (.146)	.231	.145 (.192)	.032	.619** (.150)	.170
	Compensation dummy (Compensation area=1)	.416** (.132)	.103	.645 (.173)	.125	.088 (.135)	.021
F-value		12.943**		8.504**		14.906**	
adj R <sup>2</sup>		.149		.099		.170	
N		818		818		818	

\* p&lt;.05 \*\* p&lt;.01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이탈에 대한 긍정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중앙 및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원자력발전에 대한 위험 인식 등이 있다. 먼저, 중앙 및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는 이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의 수준이 높을수록 주민들의 이탈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위험인식이 강할수록 이탈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친다.

항의에 대한 긍정적 반응에는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위험인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계의 방향은 이탈의 경우와 동일하다. 즉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강할수록 항의의 가능성은 감소하는 반면, 원자력발전에 대한 위험인식이 강할수록 항의의 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충성에 대한 긍정적 반응에는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위험에 대한 인식, 보상에 대한 인식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보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을수록 충성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반면, 원자력발전에 대한 위험인식이 강할수록 충성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의 표준화 계수의 절대값을 비교하면,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원자력발전 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현실과 부합한다.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수준과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의 방향성은 모든 반응행태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와 중앙정부에 대

한 신뢰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Rahn & Rudolph (2006) 등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다시 말해, 이는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를 분리해서 고찰할 경우,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에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주민들의 이탈과 충성의 가능성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보상에 대한 인식은 충성의 긍정적 반응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이탈과 항의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반응행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통제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탈에는 연령과 지역더미, 항의에는 학력과 지역더미, 충성에는 성별, 연령, 학력, 그리고 지역더미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이탈을 보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이탈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월성과 고리가 영광에 비해 항의의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보상지역에 비해 보상지역에서 이탈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세 반응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는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서로 다른 반응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차별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에 따라 반응행태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먼저,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월성과 고리, 그리고 보상지역 더미변수이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영광에 비해 월성과 고리 주민들이, 그리고 비보상지역에 비해 보상지역 주민들이 이탈의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항의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는 학력, 월성, 그리고 보상지역 더미변수이다. 이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영광에 비해 월성 주민들이, 비보상지역에 비해 보상지역 주민들이 항의의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충성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 그리고 고리 더미변수이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충성의 가능성이 낮아진다.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영광에 비해 고리 주민들이 충성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본 연구는 Hirschman(1970)이 제시한 세 가지의 반응행태를 적용하여 일반 국민이 지니고 있는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과 정부의 원자력 발전정책에 대한 반응행태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수준과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분석들이 지니는 단편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인구통계학 변수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 그리고 반응행태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수준, 그리고 반응행태 모두 다양한 인구통계학 변수들의 복잡한 관계를 통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은 지역별로 차별성을 지니는 반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항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다양한 인구통계학 요인들에 의해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비해, 이탈과 충성은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단순하다.

또한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에서 세 가지 반응행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에 따른 반응행태와 비교하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에 따른 세 가지 반응행태가 신뢰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모두 충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이탈과 항의의 비율에 차이가 없는 반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이탈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세 가지 반응행태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수준보다는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으로 인하여 세 가지 반응행태가 더욱 뚜렷하게 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위험인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이탈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위험인식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항의의 가능성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보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충성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보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낮은 집단에서는 항의의 가능성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반면, 보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은 집단에서는 이탈의 가능성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회귀분석 결과,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은 세 가지의 반응행태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중앙 및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는 이탈의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충성의 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의 수준이 높을수록 주민들의 이탈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충성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은 이탈과 충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에 따라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책반응이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지역주민들이 다른 현재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탈할 가능성과 현재의 거주지에 계속 머무르며 충성할 가능성에 대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체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의 증가는 이탈과 항의의 가능성을 낮추고, 충성의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결과는 Kim(2005)의 연구와 Dowding & John(2008)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원자력에 대한 위협인식과 수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검증은 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책 수용성 이전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행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역이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탈행태를 방지하고 충성의 반응을 제고하는데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뢰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원자력안전연구사업의 연구결과임(No.1303037).

## References

- Barry, B. 1974. Review Article: Exit, Voice and Loyalty.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 79-107.
- Bella, D. A., C. D. Mosher, and S. N. Calvo. 1988. Technocracy and Trust: Nuclear Waste Controversy. *Journal of Professional Issues in Engineering*. 114: 27-39.
- Chung, Ji Bum and Hong Kyu Kim. 2009. Competition, Economic Benefits, Trust, and Risk Perception in Siting a Potentially Hazardous Facility.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19: 8-16.
- Cummings, L. L. and P. Bromiley. 1995. The Organizational Trust Inventory: OTI. In Kramer, R. and T. Tyler. (eds.). *Trust in Organiz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 Dowding, K. and P. John. 2008. The Three Exit, Three Voice and Loyalty Framework: A Test with Survey Data on Local Service. *Political Studies*. 58: 288-311.
- Dowding, K., P. John, T. Mergoupis, and M. Van Vugt. 2000. Exit, Voice and Loyalty: Analytic and Empirical Development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7: 469-495.
- Evans, P. 1996. Government Action, Social Capital and Development: Reviewing the Evidence on Synergy. *World Development*. 24: 1119-1132.
- Fischhoff, B., P. Slovic, S. Lichtenstein, S. Read, and B. Combs. 1978. How Safe Is Safe Enough? Apsychometric Study of Attitudes towards Technological Risks and Benefits. *Policy Sciences*. 9: 127-152.
- Flynn, J., W. J. Burns, C. K. Mertz, and P. Slovic. 1992. Trust as a Determinant of Opposition to a High-level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Analysis of a Structural Model. *Risk Analysis*. 12(3): 417-429.
- Frewer, L. J., C. Howard, and R. Shepherd. 1998. Understanding Public Attitudes to Technology. *Journal of Risk Research*.

- 1(3): 221-235.
- Hirschman, A. 1970.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 and State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Jung, Ju Yong and Seo Yong Kim. 2014. Exploring Multidimensionality of Trust and Social Acceptance toward Nuclear Power Energy.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8(4): 51-78.
- Kang, Myung Goo. 2005.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and States*. Paju: Nanam Publishing House.
- Kim, Seo Yong and Won Soo Park. 2005. A Study on Cultural Base of EVLN(Exit, Voice, Loyalty and Neglect).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14(3): 73-102.
- Kim, Seo Yong. 2009. Exit or Voice: Empirical Studies of Tiebout's Hypothesis and Hirschman's Exit, Voice, Loyalty, and Neglect Model in Korea.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3(1): 145-169.
- Kim, Seo Yong, Seong Eun Cho, and Sun Hee Kim. 2003. Between Risk and Benefit: The Analysis on Determinants of Radioactive Waste Facility Acceptance.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15(3): 297-330.
- Kim, Seo Yong, Sang Ok Choi, and Jae Sun Wang. 2014. Individual Perception vs. Structural Context: Searching for Multilevel Determinants of Social Acceptance of New Science and Technology Across 34 Countries. *Science & Public Policy*. 44(1): 44-57.
- Kim, Seo Yong and Geun Sik Kim. 2007. Beyond Risk and Benefit: Heuristic Effect of Experienced Affect on Acceptance of Nuclear Power Station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1(3): 373-398.
- Lee, Hyun Kuk and Yoon Ho Kim. 2014.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erformance and Trust in Government.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8(4): 1-22.
- Luhmann, N. 1980. *Trust and Power*. New York: Hohn Wiley & Sons.
- Lyons, W. E. and D. Lowery. 1989. Citizen Response to Dissatisfaction in Urban Communities: A Partial Test of a General Model. *Journal of Politics*. 51(4): 841-868.
- Orbell, J. M. and T. A. Uno. 1972. Theory of Neighborhood Problem Solving: Political Action vs. Residential Mobili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6: 471-489.
- Park, Jeong Hun. 2008. Government Trust and Policy Support: The Case of National Electronic ID Policy.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46(1): 93-122.
- Poortinga, W., N. Pidgeon, and I. Lorenzoni. 2006. Public Perceptions of Nuclear Power, Climate Change and Energy Options in Britain: Summary Findings of a Survey Conducted during October and November 2005. *Understanding Risk Working Paper 06-02*. School of Environmental Sciences University of East Anglia.
- Rahn, W. M. and T. J. Rudolph. 2005. A Tale of Political Trust in American Cities. *Public Opinion Quarterly*. 69(4): 530-560.
- Rousseau, D. M., S. B. Sitkin, R. S. Burt, and C. Camerer. 1998. Introduction to Special Topic Forum: Not so Different after All: A Cross-Discipline View of Trust.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3): 393-404.
- Rusbult, C. E., D. Farrell, G. Rogers, and A. G. Manious III. 1988. Impact of Exchange Variables on Exit, Voice, Loyalty, and Neglect: an Integrative Model of Responses to Declining Job Satisfac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1: 599-627.
- Sharp, E. B. 1984. Exit, Voice and Loyalty in the Context of Local Government Problem. *Western Political Quarterly*. 37: 67-83.
- Siegrist, M. 1999. A Causal Model Explaining the Perception and Acceptance of Gene Technolog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9: 2093-2106.
- Sjöberg, L. 2009. Precautionary Attitudes and the Acceptance of a Local Nuclear Waste Repository. *Safety Science*. 47: 542-546.
- Slovic, P. 1987. Perception of Risk. *Science*. 236(17 April): 180-285.
- Slovic, P. 1993. Perceived Risk, Trust, and Democracy. *Risk Analysis*. 13(6): 675-682.
- Tiebout, C. 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 416-424.
- Wang, Jae Sun. 2013. Trust and Nuclear Power Acceptance.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22(3): 235-266.
- Wang, Jae Sun and Hyun Jung Lee. 2011. Multi-dimensionality

of Perceptions on Science Technology and Its Determinants: The Case of Public Perceptions on Genetically Modified Food(GM Food).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17(1): 145-186.

Young, D. R. 1974. Exit and Voice in the Organization of Public Services. *Social Science Information*. 13(3): 49-65.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강명구(역). 2005.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기업, 조직 및 국가의 퇴보에 대한 반응. 서울: 나남출판.

김서용, 김근식. 2007. 위험과 편익을 넘어서: 원자력 발전소 수용성에 대한 경험적 감정의 휴리스틱 효과. *한국행정학보*. 41(3): 373-398.

김서용, 박원수. 2005. EVLN(Exit, Voice, Loyalty and Neglect)의 문화적 기반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14(3): 73-102.

김서용, 조성은, 김선희. 2006. 위험과 편익의 사이에서: 방폐장 수용성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행정연구*. 15(3):

297-330.

김서용. 2009.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Tiebout 가설과 Hirschman의 EVLN(Exit, Voice, Loyalty and Neglect) 모형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행정학보*. 43(1): 145-169.

박정훈. 2008. 정부신뢰와 정책수용: 전자주민카드 정책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6(1): 93-122.

왕재선, 이현정. 2011. 과학기술인식의 다원성과 영향요인: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Food: GM Food)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7(1): 145-186.

왕재선. 2013. 신뢰와 원자력 수용성. *한국정책학회보*. 22(3): 235-266.

이현국, 김윤호. 2014. 정부서비스 성과와 정부신뢰: 서울시 정부서비스를 대상으로. *한국행정학보*. 48(4): 1-22.

정주용, 김서용. 2014. 신뢰와 원자력 수용성의 다차원성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48(4): 51-78.

---

Received: Aug. 24, 2016 / Revised: Sep. 23, 2016 / Accepted: Sep. 23, 2016

## 정부신뢰와 정책반응

– Hirschman의 EVL(Exit, Voice & Loyalty) 개념의 적용 –

국문초록 본 연구는 Hirschman(1970)이 제시한 세 가지 정책반응행태를 적용하여 일반 국민이 지니고 있는 정부 신뢰수준과 원자력 발전정책에 대한 반응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항의는 다양한 인구통계 요인에 의해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비해, 이탈과 충성은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단순하다. 둘째, 정부 신뢰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에서 다양한 반응행태가 나타나며,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 신뢰수준에 따라 반응행태의 차이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셋째, 위험인식 수준이 높은 집단은 이탈이 높은 반면, 위험인식 수준이 낮은 집단은 항의가 높다. 마지막으로, 정부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이탈이 감소하고 충성이 증가한다. 특히 지방정부 신뢰수준은 이탈과 충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는 주민들이 현 거주지를 이탈할 가능성과 그렇지 않고 충성할 가능성에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정책반응행태, EVL(Exit, Voice, Loyalty), 신뢰, 원자력 위험인식

Profiles **Chong Ho Kim** : He is Ph.D. candidate at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of Korea University. His interesting fields are policy evaluation, privatization, government owned enterprise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05chkim@gmail.com). **Jae Sun Wang** : He received his Ph.D. degree of Public Administration from Korea University(Thesis: Multi-dimensionality of Neoliberal Government Reform: Cross-National Comparisons), Korea in 2008. He is assistant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t Honam University. His interesting fields are government innovati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policy evaluation, comparative policy. And his major articles are “Public Attitudes toward the Role of Government: South Korea, Japan and Taiwan(2016, Co-author)”, “Government Trust and Environmental Risk Perceptions by Science and Technology: Comparative Analysis(2015, Co-author)”, “Individual Perception vs. Structural Context: Searching for Multilevel Determinants of Social Acceptance of New Science and Technology across 34 Countries(2014, Co-author)”(ajwjs@honam.ac.kr).